

불안을 없애면 농민은 일어난다.



농업정책연구소장

이헌목(李憲穆)

필자는 지금 중소농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정에는 '소수' 농가를 위한 전업농대책은 있었지만 '대다수' 농가를 위한 중소농대책이 없다는 비난이 있어왔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업농 숫자가 20만이고,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중소농이 110만이니 그런 비난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비난에 대해 정부는, 비록 정책은 전업농위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농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해왔다. 한편, 정부가 특별히 중소농 대책이라고 내세웠던 정책은 '고품질·친환경농업' 정책 정도였다. 논리적으로 중소농은 영농규모가 작으므로 고품질·친환경농업을 해서 비싸게 팔아야 어느 정도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 와서야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또 다른 한축의 중소농대책으로 얘기되고 있을 뿐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 중소농대책도 찬찬히 생각해 보면 허점이 많다. 먼저,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관행의 일반농업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영농을 해야 한다. 판매도 훨씬 더 잘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영농규모가 작고 소득이 낮은 농가는 대부분 경영주의 나이가 많거나, 영농에 실패하여 의욕을 상실한 '젊은' 농가이다. 과연 이들 '고령농가'나 의욕을 상실한 젊은 농가가 새삼스레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영농을 하려고 할 것인가? 개방의 확대로 농산물가격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데다, 친환경농산물은 아직 유통체제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 고령농가나 의욕을 상실한 농가가 익숙하지도 않은 친환경·고품질농업에 뛰어들려고 하겠는가?

둘째,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나 '고령농가'는 으레 경쟁력도 없고, 잘살지도 못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소유의 농지가 커든 작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

하고 젊은 사람은 농지를 빌려서, 그리고 영농규모
 화자금을 지원 받아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
 다. '고령농가'라 하더라도 노동력이 떨어질 뿐 영농
 기술과 경영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노동력만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3년 농림부
 가 작성한 '우리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천인(千人)
 '의 사례를 보면, '천인'들 중에는 거의 맨주먹으
 로 시작하여 10년 내지 20년 만에 '부농의 꿈'을 이
 룬 농가가 상당수로 나타나 있다. 물론 '성공한 천
 인'들 뒤에는 '실패한 수만'의 농민들이 있지만, 이
 들 '천인'들은 남다른 연구자세와 성실성과 인내심
 으로 닦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농의 꿈을 이루
 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영농규모도, 여
 건의 어려움도,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소농대책(결국 전체농정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맞으려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사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보통사람들 모두가 '천인'들이 보여준 연구자
 세와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농가들은 의욕과 모험심과 집중
 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들
 이 잘살기 위해 '천인'들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노력을 하더라도 돈을 버
 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생산한
 농산물이 돈이 된다는 확신이 선다면 보통사람들도
 나서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나이든 농가도 나서기
 마련이다.

중소농대책의 기본은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

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두어
 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정부가 수매를 하여 가
 격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농민들
 스스로 수급을 조정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
 스스로 판촉활동을 하여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민들
 스스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장대응에 실패하면 농민은 잘 살 수 없
 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지지는 못하더라
 도 연구비, 지도교육비, 홍보비, 조직운영비 등 '충분
 한' 간접지원을 할 수 있다. 재해와 돌발 병해충에
 따른 소득상실의 위험을 줄이는 체제를 갖추게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물론 농민들이 하기에 따라 시장
 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소득
 불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위험과 불안이 없어진다면 농민들은 스스로 일어서
 게 되어 있다.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농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과 불안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는 농민들이
 얼마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얼마나 크고 단단
 하게 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나아가면 아무리 무서운 밤길도 겁날 게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농대책도, 농민단
 체의 농민운동방향도, 농협의 개혁방향도 농민들의
 자각과 협동정신을 드높이는데 두어야 한다. 농민들
 이 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한, 다른 어떤 정책도 농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당연히 우리 농업의 희망에 대해서도 얘기
 할 수 없다.